

- 먼저, 바쁘신 와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
업체 참석자분들과 인터넷기업협회장님,
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

[그간의 플랫폼 자율기구 운영 성과]

- 現 정부는 출범 이후
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
민간 주도 방식의 플랫폼 자율규제를
국정과제*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.

* (국정 30-1)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(공정위)
(국정 59-4) 디지털 신산업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(방통위)
(국정 77-6) 혁신·공정의 플랫폼 생태계 조성(과기부) 등

- 지난해 8월부터는
‘플랫폼 자율규제 및 상생발전 촉진기구(자율기구)’가 가동되어
여러 분야에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- 예를 들어, 배달 플랫폼, 오픈마켓 분야
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
입점 약관 체결 시 필수 기재사항*을 구체화하였고,

* 계약·변경·해지 사유 및 절차,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, 악성리뷰 관련 정책,
취소·환불 관련 분쟁 해결 위한 플랫폼의 협력 의무 등

- 검색·추천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
검색·추천 결과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 등을
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.

□ 민간 주도 자율규제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에도
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, 소비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
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,

- 특히, 국민 생활과 밀접한
배달 플랫폼, 오픈마켓, 검색·추천서비스 등 분야에서
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된 점은 고무적입니다.

[향후 플랫폼 정책 추진방향]

□ 정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
민간 주도 자율규제의 성과 창출과 확산을
정책적·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.

- ❶ 먼저, 전기통신사업법에 플랫폼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와
자율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시하고,
- ❷ 자율규제 성과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
이행점검과 환류 체계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.
- ❸ 아울러, 범부처 통합 플랫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
그 결과를 플랫폼 관련 정책 수립과
향후 자율규제 추진 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.

□ 한편,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확산과 함께,
기술역량 강화,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
플랫폼 기업의 혁신 경쟁력 제고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[마무리 말씀]

□ 오늘 이 자리는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
현장 관계자분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-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가감없이 말씀해주시면,
향후 정책 수립·이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.